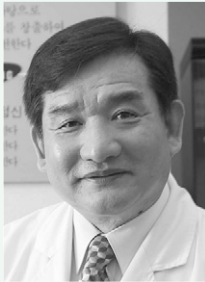


새 정부의 병원 활성화정책 방향



글 · 한 원 곤 |
강북삼성병원장
본회 기획위원장

의료시장 세계화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부응하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산업화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를 비용 관점에서 보는 억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의료의 질 향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전환 또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운영자금 확보, 시장진입과 퇴출, 수가, 수익사업의 범위 등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원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한 시장의 가격과 수요·공급 등 시장 전반에 걸친 통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부 통제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장원리를 통제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의료복지 증진 및 의료산업 선진화를 이루려면 정부의 정책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렇다면 그 정책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한병원협회가 얼마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안’이 새 정부에 바라는 병원 활성화 방향과 크게 다를 바 없겠기에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측면부터 살펴보자.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선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전국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 국민이 의료를 이용

하는데 불편을 주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병원약국의 외래조제를 막는다는지, 의사의 비전속 진료를 규제하는 등 잘못된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앞서 정부는 이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 외래환자들에 대한 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제도를 정해 지금까지 이를 운용해 오고 있다. 그로 인해 의약분업의 본질이 왜곡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병원의 외래조제를 허용하여 환자 스스로 병원 내·외 약국을 마음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낭비도 막는 것이다. 또 국민의료복지를 증진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마취과·진단검사의학과·영상의학과·치과 등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임상과 의사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특정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병원운영비를 절감하며, 아울러 전문적 의료기술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외국의 의료관광객 유지를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 등 정부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선 국내 외 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돼야 하며,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민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지역민이나 외국인에 대해선 보험적용을 배제하는 융통성 있는 운용방식을 적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확대 역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등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외부자본 조달에 대한 병원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자본유입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가에 의한 의료법인 등의 투자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계의 또 다른 제안은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이다. 의약분업 실시와 저수가 정책, 각종 규제 등 병원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산업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 의료기관들의 도산과 의료인력 수급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병원계는 전문병원의 활성화를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벌여 왔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이 없는데다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문병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개업이나 근무여건이 좋은 안과나 성형외과·피부과·이비인후과 등의 임상과는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업무강도가 높는데 비해 기대수입이 낮고 위험부담이 높은 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임상과의 지원자는 날로 줄어들어 전문의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료 차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에 한해 소위 기피 임상과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개원이나 근무여건이 어렵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인기 임상과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병원계 제안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전문의 수급 균형이 가능해져 국민의료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KHA**